역대급 불장에 투자열기 최고조… 과열 베팅 규모도 커져

코스피 최고치 랠리

주가 상승 기대 커져… 빚투족 증가
대차거래 잔액 두달새 23% '껑충'
"3800선 숨고르기 구간 들어설 것"

22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지수가 표시되고 있다. /뉴시스

금융사에서 대출을 받아 주식에 투자하는 '빚투족'이 다시 시동을 걸고 있다. 미국이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로 재진입하자 한국은 물론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 증시가 역대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어서다.

22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개미(개인 투자자)들이 유가증권시장에서 돈을 빌려 주식을 산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14조4913억원(21일 기준)으로 집계됐다. 7일 연속 14조원대다. 연초에 비해서는 5조3000억원 가량 증가했다. 투자자들의 주가 상승 기대가 커질수록 신용 잔고도 불어난다.

증권사 마이너스통장(한도대출)만이 아니다. 5대 시중은행(국민 · 신한 · 하나 · 우리 · NH농협)에 따르면 이달 16일 기준 마이너스통장 잔액은 104조6842억원이다. 지난달 말보다 8576억원 증가했다.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석 달 연속 신용대출이 감소한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10·15 부동산 대책 등 정부의 각종 규제로 주택 관련 대출 증가세가 꺾였는데 마통 인출이 눈에 띄게 늘어난 것은 최근 활황인 증시 투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 코스피 3900선 육박

'빚투족'이 급증한 것은 코스피 영향이 크다. 이날 코스피는 1.56% 상승한 3883.68에 마감했다. 종가 기준 역대 최고가다. 이달 들어 처음으로 3500선과 3800선을 차례로 돌파한 데 이어 3900선 턱밑까지 치솟았다. 지난 14일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을 시사한 데 이어 한·미 관세협상 타결 기대와 한·중 무역갈등 완화 가능성 등이 시장에 흘러나오면서 증시를 밀어 올렸다. 여기에 반도체 '수퍼사이클(초호황기)' 전망이 주가를 밀어 올렸고,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시중 자금이 부동산에서 증시로 올 수 있다는 기대도 작용했다는 평가다.

증시 주변에는 돈이 넘쳐난다. 21일 기준 투자자예탁금은 80조3298억원에 달한다. 전날보다 3000억원 가량 줄었지만, 사상 최고치 수준이다.투자자예탁금은 고객이 증권사 계좌에 맡긴 잔액의 총합으로, 흔히 투자를 위한 '실탄'에 비유되며 주가 상승 기대에 비례해 늘어난다.

전문가들은 증시로 자금이 향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한다.

고태봉 iM증권 리서치본부장은 "정부가 자금 파이프라인을 국내 증시로 연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줬기에 부동산 투기 자금이 주식 시장으로 향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기간 풀린 막대한 유동성으로 자산 가격 전반이 뛰는 '에브리싱 랠리' 상황에서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향하는 것을 막은 건 정부의 성과"라고 덧붙였다.

투자처에 대한 국민 인식 변화도 감지된다. 한국갤럽이 7월 17일 '가장 유리한 재테크 방법'을 물은 조사에서 '주식'(31%) 응답이 가장 많았다. 갤럽이 2000년 같은 조사를 시작한 이후 처음 부동산(23%)을 앞섰다.

교보증권은 보고서를 통해 "4분기 실적 시즌이 내년 1~3월인 것을 고려하면, 주가는 내년 상반기까지 실적 모멘텀을 동반한 상승이 유효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 공매도 잔고 연중 최고치 경신

증시 과열에 베팅하는 투자자들도 늘었다. 지난 17일 기준 코스피 공매도 순보유 잔고는 12조3183억원으로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다. 공매도가 재개된 지난 3월 31일(3조9156억원) 이후로는 215% 급증한 수치다. 이달 들어서도 약 8%(9116억원) 불어났다. 같은 기간 코스닥 공매도 잔고 역시 4조9789억원으로 5조원에 근접한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예상하는 투자자가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추후 주가가 떨어지면 주식을 매수해 갚는 투자 기법이다.

공매도 대기 자금으로 꼽히는 대차거래 잔액도 9월 초 95조5898억원에서 이달 21일 기준 117조4753억원으로 22.9% 급증했다.

'빚투 거품'이 꺼진 후 날아올 청구서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다. 금융시장에 풀린 풍부한 유동성 덕분에 2007년 2000선을 돌파했다가 1년 뒤에 글로벌 금융위기로 추락한 악몽이 재연될 수 있다는 경계감이다.

이성훈 키움증권 연구원은 "국내 증시는 단기 고점 인식 속 주도주 차익실현 욕구 점증 등에 영향을 받으면서 3800포인트 선을 전후로 수급 공방전 속 숨고르기 구간에 돌입할 전망"이라며 단기 과열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했다. 강진혁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코스피가 반도체와 2차전지 등 대형주 수급 쏠림이 야기한 '왜곡된 상승'"이라며 "지난 17일에도 신고가를 경신했지만, 상승 종목(222개)보다 하락종목(672개)이 3배 이상 많은 왜곡 현상이 있었다"고 분석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연이은 해킹 사고

'보여주기식 제도' 피해 키웠다… "보상 등 원칙 세워야"

인증·감독 등 구조적 문제 겹쳐
업계 "기술적·제도적 개편 필요"


홍범식(왼쪽 세번째부터) LGU+ 대표,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 김광일 MBK 대표이사, 유영상 SKT 대표, 김영섭 KT 대표가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국정감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국내 통신사 해킹 사고가 잇따르며 보안 체계에 근본적 결함이 드러났다. 코어망과 인증 구간의 취약성, 외주 관리 부실, 탐지·통보 지연 등 구조적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정부는 뒤늦게 관계부처 합동 대책을 내놨지만, '땜질식 대응'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22일 〈메트로경제 신문〉 취재를 종합해보면, 계속 이어진 해킹 사고의 배경에는 코어망·인증 경계 취약, 외주 관리 허점, 탐지·통보 지연, 분절된 감독 체계라는 구조적 문제가 겹쳐 있다. 이 같은 허점은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전날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영섭 KT 대표와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는 해킹·보안 관련 부실 대응으로 집중 추궁을 받았다.

기업 해킹 대응 체계가 매번 사고 후 땜질식으로 끝나는 이유는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게 보안업계의 주장이다. 현장의 공통된 진단은 "보안이 '보여주기식 제도'에 갇혀 있다"는 것이다. 보안 전문가들은 "이제 보여주기식 관리가 아니라, 구조 자체를 갈아엎을 기술적·제도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통신사 해킹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된 홈가입자서버(HSS)·통합데이터관리(UDM) 등 핵심 자산은 폐쇄망 운용과 다중키 분산 저장, 실시간 무결성 검증이 필수다. 관리 계정은 원격 비서명 접속을 차단하고 세션 기록을 의무화해야 한다.

또 위장 기지국에 대응하기 위해 단말-기지국 간 상호 인증을 기본값으로 하고, 의심 신호 차단과 인증 이상 탐지 기능을 상용망에 도입해야 한다. 통신사와 결제사의 이상거래 탐지시스템(FDS)을 연동해 단말 식별정보와 결제 패턴을 교차 검증하는 체계도 필요하다.

최근 해킹의 상당수는 외주 인력 계정을 통한 내부 침입에서 시작됐다. 협력사 계정에는 제로트러스트 원칙과 최소권한 접근 정책을 강제하고, 고객망과 관리망을 완전히 분리해야 한다.

외주 접속 과정 전 구간의 세션을 녹화·보관하고, 외주업체 보안 인증을 주기적으로 재검증하는 제도적 장치도 요구된다. 통신·금융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실시간 이상징후 공유 지도와 자동 경보 룰북을 마련해야 한다.

보안업계 관계자는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우 요금 감면이나 위약금 면제 등 집단 보상 절차를 법정 기본값으로 두는 게 피해 최소화의 출발점"이라고 전했다.

/김서현 기자 seoh@

정부 "공공·민간 통합대응체제 구축… 과징금 등 제재 강화"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
국가안보실 주도 협의체 구성

정부가 최근 잇따른 해킹 사고로 높아진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국가 전반의 사이버 보안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내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단기간에 실행 가능한 과제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연내 중장기 계획인 '국가 사이버안보 전략'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정부는 국가안보실 주도로 과기정통부,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가정보원,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범부처 협의체를 구성해 공공·민간을 아우르는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정부는 ▲핵심 IT 시스템 보안 점검 ▲소비자 중심 사고 대응체계 구축 ▲정보보호 투자 확대 및 산업 육성 ▲범국가적 협력 강화 등을 추진 방향으로 제시했다.

공공기관, 금융사, 통신사 등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1600여 IT 시스템에 대한 보안 취약점 점검이 즉시 실시된다. 통신사는 해킹 시나리오를 적용한 불시 점검을 받게 되며, 펨토셀 등 소형 기지국은 보안이 미흡할 경우 폐기된다.

보안 인증제도(ISMS·ISMS-P)는 서류심사에서 현장 중심으로 전환되고, 중대한 결함 발견 시 인증 취소가 가능하도록 관리가 강화된다.

기업의 보안 부실로 해킹이 발생한 경우 소비자 입증 책임을 완화하고, 이용자 보호 매뉴얼을 의무화한다.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일부는 피해자 지원에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또 정부가 기업 신고 없이도 해킹 정황을 파악하면 즉시 조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고, 지연 신고나 재발 방지 미이행 등에 대한 과징금과 징벌적 제재도 강화된다.

공공기관은 정보화 예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보안에 투자하도록 하고, 정보보호 책임관 직급을 실장급으로 격상한다. 민간기업은 상장사 전체로 정보보호 공시 의무가 확대되며, CEO의 보안책임 원칙도 법제화된다.

보안 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을 위한 지역 정보보호 지원센터는 10개소에서 16개소로 늘어난다.

정부는 소비자에게 특정 보안 프로그램 설치를 강요하는 관행을 단계적으로 제한하고, 다중 인증과 AI 기반 이상탐지 시스템으로 대체할 예정이다.

또 물리적 망분리 중심의 보안 체계를 데이터 중심 보안 체계로 전환하고, 클라우드·AI 환경에 맞는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김서현 기자